“공원 녹지는 도시 인프라…민간의존은 문제”

‘도시공원 일몰제’ 토론회 “구도심 재생 매개로 삼아 ‘광주만의 방식’ 고민” 제안

공원 녹지를 도시 인프라로 접근해 도시 경쟁력 향상 및 구도심 재생의 매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시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만을 고려한 고층 아파트 개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합의와 공공성을 가미한 ‘광주만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동신대 링크사업단 주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대응 방안 관련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공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광주시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업체의 개발에만 의존하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중앙공원과 관련해 주제발표한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공공조성(국가+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공공조성+일부 해제 후 계획적 관리’, ‘일부 공공조성+일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4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조 교수는 중앙공원 공공조성의 경우 6600억원의 재원이 필요로 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만7640세대의 아파트 공급 등 과도한 난개발과 구도심 쇠락을 초래할 것으로 진단했다. 광주시나 국가의 재정을 일부 투입한 뒤 나머지 면적에 대해 계획적 관리를 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면 비용이나 개발 면적은 축소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조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지정이든 광주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든 간에 공원 전체 부지에 대해서 단순히 민간공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역할을 솔선수범해야한다”며 “국가공원 지정에 대한 노력, 광주시 재정 투입 확대를 병행함과 동시에 해제 후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외공원 사례를 주제발표한 유영국 지오시티 대표이사는 1단계로 국비 확보를 통한 비엔날레공원과 비엔날레밸리 조성 추진, 2단계 존치지역과 개발가능지역 파악, 3단계 개발가능지역 가운데 대로에 접근한 저지대 등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시설 유치 제안 공모 추진, 4단계 개발면적 대폭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채택 등 단계적 접근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규 광주대 교수는 영산강 대상공원 사례발표에 나서 미집행공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규제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시 투명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곡공원 사례를 발표한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1순위로 ‘전부 공공조성’, 2순위로 ‘부분해제’, ‘부분공공조성’, ‘부분민간공원’ 등의 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동범 교수는 공공수익형, 민영수익형 해제지역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재산세 면세)를 제시한 뒤 산림청의 생태보전기금, 도시숲조성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구도심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동범 교수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에 대해 광주형 방안을 도출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해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시민민주주의의 정치”라며 “광주는 수단으로서의 환경과 녹지량을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며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月 25만원…기초연금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시행

2021년 4월 30만원으로

노인 10만명 삭감 면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던 노인 10만명이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행 월 30만9000원에서 월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 구간에 있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나?

▲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음주 고글’ 체험 어린이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광주 북구 보건소가 21일 중흥어린이집에서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서 어린이들이 ‘음주 고글’을 쓰고 똑바로 걷기 게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종환 장관 28일 광주 방문…옛 도청 복원 논의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과 관련, 도종환〈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21일 문체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도 장관은 오는 28일 광주를 방문,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경찰청 등을 리모델링한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민평의 주요 건물을 80년 광주항쟁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도 장관을 만나 민평의 원형복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장관은 광주에서 옛 도청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대책위, 광주시 관계자 등과 복원 기간과 예산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민원실)과 옛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 건물은 민평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총탄 자국과 시민군 상황실·방송실이 철거돼 원형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 전당은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했지만, 민평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시민군 상황실·방송실과 보초 동선이었던 건물 연결통로 등 역사공간을 되살리고, 희생자 시신 수습 장소에 들어선 문화전당 방문자센터 철거 등을 골자로 한 복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상향조정해야”

광전연 “낙후도 지수만으론 불균형 해소 미흡”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낙후도 지수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역불균형 해소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인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는 현재 20~30%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저수준인 2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3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9% 수준이지만, 아직도 낙후지역의 발전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낙후도 지수를 표준화시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으나, 지역낙후도 분석만으로는 지역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실정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낙후도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및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저성장과 장기적 저금리 추세 등을 참조해 현행 5.5%를 비수도권 3%, 순수국가공공재 4%, 수도권 4.5%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활용한 종합판단 시 외부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내부평가자보다는 외부평가자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과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던 타당성조사 결과의 신뢰성 상실로 인해 1999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및 중기재정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최초 도입시기부터 2016년까지 654건이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비율은 절반이 안 되는 47.5%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달 독감 무료접종 확대

생후 6~59개월·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생후 6~59개월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2018년 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달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 등 1만9000여 곳에서 접종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접종대상은 지난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올해 6~59개월 (2012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출생) 이하로 확대됐다. 대상 인원은 32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訃 告

學校法人 普文學塾·財團法人 普文福祉財團 設立者 東谷 鄭亨來 理事長께서 2017년 8월 21일 오전 1시 17분 宿患으로 別世 하셨기에 學校葬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광주 그린장례식장 2층 VIP실 예궁
·발 인 : 2017년 8월 24일(목) 오전 9시
·장 지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선영 하

미망인 석두정 자부 고혜주
아들 정영헌 김진시
딸 경태 사위 김재열
경남 국중귀
보경 유준호
주리 외손자 유창은
연중 외손녀 김나연
승준 김은정
승원 국채리
손자 하윤 국채연
손녀

※연락처(빈소) 062-250-4455
개별부고는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등학교 장례위원회

장례위원장 교장 주영곤
장례위원 강경섭 김덕모 백현호 윤창혁 이종기 정승로 정진래 정행웅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 임직원
하동정씨대종회 회장 정원채
광주향교 전교 김장생
광주숭일고등학교 총동창회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재단법인 성균관유도회 총본부